



지난 15일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 참사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매몰돼 '안전'을 포기한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많다. 해당 펜션 소유주는 단일한 인식으로 수년째 영업을 해왔고 관할 자치단체는 10년 가까이 점검을 벌이면서도 무허가 화기 취급 시설을 적발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마저 수 차례의 점검을 벌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총체적인 안전 실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담당관리들 '안일한 인식' 버리고 시민들 사고예방 훈련을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7>말뿐인 안전... '모두가 책임자' 인식을

결도는 매뉴얼... 컨트롤타워 없어
 사고났다 하면 우왕좌왕
 근본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해야



홍도해역에서 발생했던 유람선 좌초 사고.

#. 지난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발생 현장에서 담양 소방서측은 일부에서 제기된 환자 결박 의혹과 관련, "결박은 없었다"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소방서측은 환자를 묶은 천을 가위로 잘랐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브리핑 자리에서 재차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일부 환자들이 화재 당시 침상에 신체 일부가 묶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의 컨트롤타워인 소방서의 미흡한 대처는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 뒤 부실한 조동 대처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해경이 그동안 '안락한 해상임무 수행과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내걸고 수 차례에 걸쳐 해상종합훈련까지 했던 탓에 '탁상행정식 소'라는 식비판도 터져나왔다. 해경은 지난 3월 목포 인근 해상 및 육상에서 인명구조·응급환자 처치·비상조타 등 9개 부문 24개 종목에 대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지만 침몰 선박에서의 구조 훈련은 제외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머물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경은 승객 또는 선원 퇴선 여부 등을 파악토록 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이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 담양 펜션 화재 사고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안전 불감증'이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 밖을 나다니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 정도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상당수 대형 사고가 '관행'처럼 이어져온 단일한 안전 의식에서 촉발되지만 일사분란하게 작동해야 할 매뉴얼과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불안 상황을 더욱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시급한 실정이다.

▷매뉴얼만 3300개...아직도 안 만들었다=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전남도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에 '매뉴얼 정비'를 지시했다. 기존 위기상황 발생 때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정부 위기관리 매뉴얼만 3400여개. 재난을 25종으로 나눠 재난에 따른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고 있는 표준 매뉴얼과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3200

여개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으로 나뉜다. 전남도의 경우 만들어야 할 매뉴얼만 33개. 22개 시·군에서는 각각 18~20개씩 모두 433개의 매뉴얼을 만들어 위기 상황 시 구체적인 행동을 적절히 수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시 9월까지 행동매뉴얼을 정비토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해남과 화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의 '매뉴얼 정비 작업'은 진행형이다. 이대로라면 올 해까지도 가능할 지 회의적 시각도 많다.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매뉴얼을 숙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리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원인 조사와 분석을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우왕좌왕...대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세월호 침몰 사고의 정부 대응은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침몰 직후 재난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고 교육부도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본부를 꾸렸다. 여기에 해양경찰청·전남도·진도군 등도 수습본부와 구조본부를 차려 10개가 넘는 본부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여수 우이산호 기류 유출 사고 때도 여수시와 해양경찰의 엇박자, 부실한 초기 대응, 매뉴얼 무시 등 세월호 침몰 참사 때와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따르는 대형 사고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사고 초기 현장 전문가가 컨트롤타워로 지정돼 관련 기관이 대응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전형적 관료주의의 폐단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재난구조 일원화를 위한 조치도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담당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라는 점에서 담당 기관·관리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아울러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밀려 '안전'을 포기한 사회 분위기 개선 및 '모두가 책임자'라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22개 시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현황

시·군	계	완료	작성 중	현황
계	433	383	50	
담양	18	10	8(다중밀집시설, 육상화물운송, 항공기 등)	최종 검토 중
장성	22	20	2(도로터널, 항공기)	11월말 예정
곡성	20	17	3(도로터널, 항공기, 문화재)	
구례	19	18	1(항공기)	11월 말 예정
고흥	18	17	1(항공기)	11월 말 예정
보성	20	16	4(감염병, 항공기 등)	12월 말 예정
순천	21	21	0	
광양	22	18	4(전력, 항공기, 가스 등)	작성 중
여수	21	21	0	완료
강진	20	17	3(육상화물운송, 도로터널, 항공기)	12월말 예정
영암	19	17	2(전력, 항공기)	12월말 예정
장흥	20	15	5(대형화산폭발, 정부주요시설, 항공기 등)	12월말 예정
해남	18	18	0	완료
신안	22	21	1(항공기)	작성 중
목포	18	18	0	
완도	18	16	2(다중밀집시설, 항공기)	12월말 예정
진도	19	18	1(항공기)	12월말 예정
무안	20	14	6(다중밀집시설, 전력, 정부주요시설, 문화재 등)	11월말 예정
영광	20	18	2(대규모해양오염, 도로터널)	11월말 예정
함평	20	16	4(다중밀집시설, 항공기, 도로터널)	11월말 예정
화순	18	18	0	완료
나주	20	19	1(항공기)	11월말 예정



장성요양병원 화재현장.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